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1
----------	------

발의연월일 : 2024. 7. 26.

발 의 자 : 한정애 · 김준형 · 서영교
송옥주 · 민형배 · 김주영
김재원 · 김영배 · 정성호
박홍근 · 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①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금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①</u> <u>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u> <u>급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u> <u>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u> <u>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u> <u>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u> <u>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u> <u>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②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u> <u>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u> <u>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u> <u>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u> <u>소급하여 지급한다.</u>